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구 미 시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아읍 마을 주민단체에서 주민이용시설(경로당,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요청

나. 공공의 주민이용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여, 마을주민의
소득증대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영구시설물 :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 기간 : 2025. 5월 ~ 2025. 12월

(3) 설치대상지 : 고아읍 예강리 260-6번지 등 3개소

(4) 주요시설 :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

나. 운영방법

(1) 운영주체 : 고아읍 마을 주민단체(예강2리, 봉한2리, 괴평2리)

(2) 운영기간 : 2025년 ~ 2045년(20년)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10년이내 2회 연장가능)

(3) 운영범위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다. 발전시설 설치계획

(1) 시설 : PV(태양광 발전) 3개소, 각 10~20kW 설치환경에 따라 용량조정

(2) 설치대상지

연번	구분	주소	담당부서	비고
1	예강2리 경로당	예강리 260-6	어르신복지과	신규설치
2	봉한2리 경로당	봉한리 911-238	어르신복지과	신규설치
3	괴평2리 마을회관	괴평리 208-1	새마을과	신규설치

라. 향후 추진계획

(1) 2025. 3월 :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

(2) 2025. 4월 : 공유재산 사용허가

(3) 2025. 5월 : 사업 착수

(4) 2025. 12월 : 사업 완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2. 생략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 8. 생략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 ~ 11. 생략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소 관 부 서		전략산업과
입 안 자	과 장	홍 상 현
	팀 장	김 영 필
	담 당 자	이 승 훈 (480-6196)